새만금 SOC 기반구축 가속화될 듯

신공항 계획반영 · 남북도로 발주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설계착수 · 새만금항-대야 철도 확정 등

새만금에 공항, 도로, 철도 등 주요 SOC사업 국가계획 반영으로 전북도 핵심 기반시설 확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전북도 최대 현안이었던 새만금 신공항 국가계획반영과 새만금 남북도로 발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설계착수 및 새만금항-대야 철도 건설사업의 신규사업 확정 등 새만금 SOC 기반 구축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됐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건설 국가계획 반영으로 전북도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 신공항 건설' 토대가 마련됐으며, 이는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결집해 20년만에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해 5월 10일 정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 내용을 반영.고시했다. 장래 새만금 개발 활성화 추이를 고려해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사업시기 등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공항건설의 후속조치로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용역을 지난해 12월 23일 착수했으며, 올해 말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동서도로'는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으며, '남북도로' 공사발주로 십자형(十形) 내부간선도로 구축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이 기대된다.

또한, 새만금 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새만금항~대야 철도건설이 신규사업으로 반영.고시됐다.

지난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만금항~대야 철도 건설이 착수사업으로 반영됐으며, 전주~김천철도 건설사업이 추가 검토대상사업으로 반영됐다.

이는 새만금 신항만 착수에 따른 신항만과 내륙 동 서간을 연결하는 물류대동맥 역할을 수행할 철도건설의 토대가 마련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에 반영된 공항, 도로, 철도 등 국가계획사업이 계획기간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갈 계획"이라며,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김관영, 기자가 뽑은 '백봉신사상' 받아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제18회 '백봉신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2013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 백봉 라옹균 선생을 기리기 위한 상으로 신사적인 정치인을 양성하고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1999년 제정됐다.

수상자는 매년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의 투표로 결정되며, 올해는 국회 출입기자 350명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평가 기준은 △정치적 리더십 △업적 및 성과 △교양과 지성 △모범적 의정활동 등 4개 분야다.

신 사 의 원 베스트 10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 김 종 인 · 우 상 호 · 전혜숙 ·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 안철수 의원 · 정세균 국회의장이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이 대상을 수상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삼성 새만금 투자 파기 규탄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과 이해숙.국주영은 의원이 서울 삼성본사 앞에서 '삼성 새만금 투자 파기' 규탄 제4차 1인 시위에 나섰다.

새만금 투자 파기로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삼성의 사과와 후속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도민의 입장을 대신해 직접 행동으로 규탄에 나서 벌써 4번째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특히, 삼성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의 불법지원으로 8조원 가량 부당이익 취한 것과 삼성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지원한 사실을 규탄하는 시위도 진행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번 4차 1인 시위는 삼성이 전북도민보다 비선실세였던 최순실과 정유라를 먼저 챙기는 것에 더욱 강력히 규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숙 의원은 "이번 4차 시위는 삼성이 비선실세 지원 사실을 규탄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양용모 의원은 "오는 1월에는 조사특별위원회 설치 의안을 제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재용 기자

본사인사

▲지역주재문정곤 · 고판호 · 이중복차장
명 : 부장대우
▲편집부 장은승 기자
명 : 차장대우
▲업무국 이수아 · 김자양 사원
명 : 차장대우 〈1월 2일자〉

도지사 선정기업 인증서 수여식

전북도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도지사인증상품 선정업체 대표 28명과 진흥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개 인증상품 선정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도-유관기관 '협업' 통해 AI 차단방역 총력

김제시 용지면 발생시 도청 570명 · 시청 760명 · 35사단 200여명 등 투입

AI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도와 유관기관이 총력적 협업을 통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20일 대규모 산란단지인 김제시 용지면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도에서는 26일부터 28일사이에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실국장을 비롯해 직원들까지 도청 공무원 총 570여명이 투입했다.

발생 시군인 김제시에서도 부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 760명이 투입돼 살처분 작업에 솔선수범했다.

또한 군부대에서는 35사단장 및 직할대 장교와 부사관 등 100명이 지난 28일 김제시 용지면 살처분 현장에 참여해 신속한 살처분을 도왔고, 시군의 주요 이동통제초소에는 사병 100여명이 투입돼 축산차량 등 전파요인 차단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 경찰청은 관내 AI 발생 시군 등을 중심으로 초소에 경찰서 인력 50여명을 매일 투입해 교통흐름 및 현장의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김제경찰서측은 김제시와 함께 용지면 살처분 거부농가를 대상으로 끈기있게 설득해 물리적 충돌 없이 신속한 살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전북농협은 본부장 및 임직원 100여명이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과 28일에 살처분 현장에 투입돼 구슬땀을 흘리며 김제 살처분 작업이 조기에 완료하는데 기여했다.

그 외 소방인력 25명, 의용소방대 50명, 자원봉사단원 99명등 도 살처분 작업현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이러한 총력적 협업을 통해 대규모 산란단지인 김제시 용지면 가금농가 64호 162만7,000수에 대한 살처분 작업을 지난 28일 완료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군.경 및 농축협,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적극적인 상호협조 및 자원봉사가 이뤄져 고병원성 AI 확산방지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AI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견고히 해 일반 도민과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도내 시내 · 농어촌버스 요금 100원 인상

이달 중 시행될 예정

전북도내 시내 · 농어촌버스 요금이 지난 2014년 2월 인상 이후 3년만에 소폭(100원) 인상된다.

이번 시내.농어촌 버스 요금 조정은 버스 이용객들의 부담 최소화와 버스 업계의 경영.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뒀다.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조정에 대한 검증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시행 결과 현행 요금보다 16.4% 오른 214원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타 시.도의 경우에 평균 160원 정도 인상한 것을 고려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버스요금 조정은 카드결재 시스템 개선, 요금조정에 대한 도민 홍보 등 요금신고 수리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시행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정치인 권력 나누기식 개헌논의 안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 "중앙의 권력구조를 개편해서 새누리당 정권연장하려고 또 거기에 끼어서 또 권력을 나눠 가지려는 정치인만의 개헌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전주시 경기전 앞에서 전주지역 작가들과 송년 시국대화를 갖고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촛불민심과 동떨어지는 개헌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주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개헌하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국민 기본권을 증대시키는 것, 그리고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개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특검이 진상을 제대로 구명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동안 문화예술인이 자유를 침해당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에서 배제당하고, 문화예술 작업을 발표할 공간과 기회를 빼앗기고, 독재정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버젓이 대명천지에 행해졌다"며 "이곳 전북의 문화예술인 가운데에서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분이 정말 많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예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적폐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적폐"라며 "우리가 대청소해야 될 적폐"라고 단언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복수해야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것이 복수가 아니다. '가장 최선의 복수는 적들과 다르게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뉴시스